

## Online Series

2015. 2. 16. | CO 15-04

# 김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서동구(국제관계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김정은에 의한 3대 권력세습은 극히 이례적인 정치현상이다. 최근 쿠바의 대미국교 정상화 추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글로벌 맥락에서 보더라도 김정은의 고립체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외부정보 내지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변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신지도층은 이와 같은 글로벌 변화와 압력에 대해 체제 생존과 보위를 위한 북한식 대응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즉, 대외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정보와 보안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예상과 달리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보안기구의 역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체제 내구성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이 기구를 중심으로 대남전략을 기획 및 투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 대북전략 구상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주요 정보·보안기구(NKIS)<sup>1)</sup>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대남 정보

기관으로서 정찰총국(미국 CIA), 국내보안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위부(미국 FBI), 군 보안기관으로서 보위사령부(기무사), 경호기관으로서 호위사령부(경호실), 해외·남한 중북세력 관리기관으로서 통일전선부, 경찰기구인 인민보안부가 있다.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부는 국방위원회 소속, 보위사령부와 호위사령부는 군부 소속,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산하로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관은 바로 정찰총국과 국가안전보위부이다.<sup>2)</sup> 그 이유는 정찰총국은 최근 해외·대남 정보역량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했다는 점이며 국가안전보위부는 정권안보의 핵심기관으로서 3대 권력세습 이래 국내정치적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찰총국의 구성과 기능

북한은 2009년 5월 NKIS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노동당과 인민무력부 산하에 산재해있던 해외 및 대남정보기관을 통폐합시켰다. 즉, 노동당 산하 작전부 및 대외정보조사부(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을 통합하여 정찰총국(General Bureau of Reconnaissance: GBR)을 신설한 것이다. 초대 정찰총국장 김영철(69세)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군사부문 남북회담에 여러 차례 참여한 대남 전략통이다. 그는 2009년 5월 초대 총국장으로 취임한 다음해인 2010년 9월 당 중앙군사위 위원 및 당 중앙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김총국장은 취임한지 10개월 만에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자행했는데 김정일은 직후 5월 14일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정찰총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찰총국은 황장엽 암살조 파견(2010.4), 디도스 테러(2011~12) 등 준군사 공작뿐만 아니라 암살공작 및 사이버테러 등 대담한 공작을 연이어 주도했다. 김정일은 2013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아 연회를 열면서 “정찰총국만 있으면 그 어떤 제재도 뚫을 수 있다. 정찰총국과 같은 용맹한 전사들만 있으면 강성국가 건설은 문제없다”면서 김영철이 이끄는 정찰총국에 큰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는 김정일이 정찰총국의 대남정보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 NKIS는 North Korean Intelligence & Security의 약자로서 북한의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2) 2014년 11월 초 클래퍼 미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이 방북했을 때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공항 영접과 최초 회담을 주관했으며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만찬을 주최했다. 이는 NKIS에서 차지하는 양 기관의 위상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정찰총국은 4~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국은 ‘전투정찰국’으로 과거 노동당 작전부가 이전된 부서로서 대남침투공작이 주 임무이다. 대표적 공작으로 1996년 강릉해안 침투, 1998년 속초해안 침투 등이 있다. 제2국은 과거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이관된 조직으로 대표적 공작으로는 1968년 124 군부대 청와대 기습, 1983년 아웅산 테러 등이 있다. 한편 제2국은 ‘핵·화학지도국’으로 유사 시 남한 후방에 침투해 원자력발전소와 화학시설에 대해 파괴공작을 수행하는 부서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과거 인민무력부 정찰국 기능은 제1국 ‘전투정찰국’과 제5국 ‘해외정찰국’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3국은 ‘기술정찰국’으로 북한 최고의 사이버테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평양소재 과학영재 학교 금성 중학교를 졸업하고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 대학(일명 미림 대학) 또는 정찰총국 산하 모란봉 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해외파견 요원들은 북경이나 심양 등지에서 해킹활동을 전담하면서 해외금융망에 직접 침투하여 보이스 피싱을 통해 사이버 외화벌이 활동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5국은 ‘해외정찰국’으로 과거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35호실)가 이관된 조직이다. 대표적 공작으로는 1987년 KAL 공중폭파, 1996년 무하마드 간수 우회침투 등이 있다.<sup>3)</sup>

### 정찰총국의 역량강화: 사이버전

북한이 해외 및 대남공작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정찰총국을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편입한 것은 대남공작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남공작기법을 선진화, 고급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3국 ‘기술정찰국’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분야 역량강화이다. 김정일은 과거 “21세기 전쟁은 총알과 기름전쟁이 아니라 정보전이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원자탄이고 인터넷은 총알이다”라는 교시를 내린 적이 있다. 특히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 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4)</sup> 이와 같이 북한은 사이버전을 비대칭 역량차원에서 강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장부인(plausible deniability) 가능성이<sup>5)</sup> 크다는 전술적 측면도

3) 정평호, 『정보기관 이야기』 (퍼플, 2013), pp. 224~226.

4) 변상정, “쿨 워(Cool War) 시대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군사논단』 (2013), p. 35.

5) 비밀공작의 주체가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작주체에 대한 보안유지를 통해 사후 비밀공작의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고려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은 2009년 7월 7일 ‘7.7 디도스 공격’으로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정찰총국이 출범한지 두 달 만이다. 이후 ‘3.4 디도스 공격’(2011.3), ‘농협 전산망 해킹’(2011.4), ‘선관위 디도스 공격’(2011.10), ‘중앙일보 전산망 해킹’(2012.6), ‘3.20 사이버 공격’(2013.3), ‘6.25 사이버 공격’(2013.6)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4년 11월 24일 소니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개시되었으며 12월에는 한수원 원전설계도가 유출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클래퍼(James Clapper) 미 국가정보장(DNI)은 2015년 1월 7일 뉴욕 포담 대학에서 개최된 사이버보안회의에서 “소니픽처스 해킹은 정찰총국이 총괄했으며 김영철 총국장이 명령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코미(James Comey) FBI 국장도 같은 행사에서 “해커들의 IP 주소들을 추적한 결과 북한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현대 전자전이라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맞춰 저비용 고효율의 사이버 테러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대미 사이버 해킹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국 및 한국에 대해 사이버 해킹은 물론 사이버 테러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안전보위부의 기능과 임무

국가안전보위부(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는 일찍이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 1973년 5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거하여 정무원 산하 사회안전부 기능 중 정치보위에 관한 부문만 독립하여 ‘국가정치보위부’<sup>6)</sup> 출범하였다. 김일성은 출범당시 “국가정치보위부는 당의 한 개 부서이며 나에게 직접 복종한다”고 선언하면서<sup>7)</sup> “중과분자와 계급의 원쑤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 씨를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기관은 탄생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6) 국가정치보위부는 1993년 현재의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되었다.

7) 윤대일, 『악의 축 집행부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월간조선사, 2002), pp. 31~32.

3대 세습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의 기능강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2012년 4월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취임한 김원홍(70세)은 인민군 대장의 보위사령관 출신이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국방위원회 위원 겸 당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체포와 처형을 주도하면서 김정은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원홍 보위부장은 당 중앙군사위 위원, 당 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등 3개 직책을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김보위부장은 추가로 국방위원회 위원, 당 정치국 위원직을 보유하고 있어 정치적 위상은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대남공작 전문가인 김영철 총국장과는 달리 권력투쟁과 같은 국내정치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임무는 ①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② 반체제 인물 색출 ③ 정치범 수용소 관리 ④ 반탐업무 ⑤ 해외정보수집 및 공작 ⑥ 국경경비 및 출입국 관리 등이다. 반탐은 방첩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해외정보수집 및 공작업무는 정찰총국과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위부의 해외활동은 주로 해외방첩, 체제 보위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공작기능에 주력하고 있어 정찰총국 제5국 ‘해외정찰국’ 기능과는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방첩의 예를 들면 적대적인 국가들이 중국에서 전개하는 대북 정보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반탐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활동이다. 물론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에 대한 첩보수집 및 송환활동도 보위부의 몫이다. 방첩활동의 기초는 수비이지만 적극적 또는 공세적 방첩공작도 있다. 원정화와 같은 위장탈북자 간첩이 우리 안보기관을 대상으로 첩보활동을 전개한 것이 좋은 예이다. 2003년부터 2013년간 체포된 간첩 49명 중 약 40%가 탈북자로 위장 침투했다는 분석도 있는데<sup>8)</sup> 보위부는 물론 정찰 총국도 경쟁적으로 탈북자 공작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안전보위부와 북한인권문제

김정은 정권은 출범이래 보위부를 통해 주민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체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말

8) 김윤영, “위장탈북자 간첩 실태 및 대책,” 『북한학보』, 제39집 2호 (2014), p. 18.

보위부는 DVD 유입·유포·시청 혐의로 공개처형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북한인권의 현주소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북한인권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었다. 2014년 12월 18일 유엔총회는 한 달 전 제3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 인권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2014년 10월 7일 이례적으로 북한인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설명회에서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유엔이 폐지를 권고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는 없다. 다만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 향상되는 노동교화소는 있다”고 대응했다. 이는 북한 형법에 근거한 형식적인 주장으로서 북한에는 현재 평안남도 개천,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청진과 명간 등 5개 지역 수용소에 최소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9)</sup> 북한의 최북단 회령관리소가 2012년 폐쇄되고 북창관리소도 축소·이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에 호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대외 은닉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이 최초로 자국의 인권설명회를 국제무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반증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동독의 슈타지 경우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폭압적 방식으로 활동하다가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도출된 1975년 헬싱키협정(the Helsinki Accords) 에서 동구권 국가들이 인권보장 의무에 합의한 이래 활동패턴을 변화시킨 바 있다. 즉 반체제 세력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조치보다는 ‘심리적 테러’, ‘와해’ 등 간접적 조치에 주력했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지속 고조된다면 국가안정보위부의 활동패턴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9)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p. 157-158.

## 우리의 대응방향

김정은 체제 출범이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대남공작과 대내보안 정보활동도 대폭 강화된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사회주의 3대 권력세습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내외적 체제 위협요소 역시 전례 없이 크다는 인식 하에 체제 수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먼저 정찰총국은 사이버전을 핵, 미사일과 함께 3대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간주하면서 국가적 사업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이버 보안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방어목적의 사이버 무기도<sup>10)</sup>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시켜야 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는 체제 보위를 위한 최일선 조직으로서 북한 주민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인도 범죄’<sup>11)</sup> 시효가 없으며 문명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되어야 할 최악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동시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 고조시켜야 한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0)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은 세계최고수준의 사이버전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용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11) ‘반인도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살인, 고문, 강제추방, 강간/강제매춘, 강제실종, 국제법위반 구금/신체적 자유박탈 및 기타 고의적 비인도적 행위 등이다. 외교통상부, 『국제법 기본 법규집』(외교통상부, 2008), pp. 1010~1011.